

국힘, 대선 체제 전환…민주 “염치 있다면 후보 내지 말라”

당내 선관위원장에 황우여…당내 통합·중도층 공략 최우선
잠재 후보 10여명 출마…후보 압축 위한 ‘컷오프’ 방식 주목

국민의힘이 7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사흘 만에 대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대선 체제로 전환했다.

국민의힘은 탄핵 책임론을 둘러싼 계파 갈등 차단과 당내 통합, 중도층 공략을 우선순위에 두고 대권을 향한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장을 선관위원장으로 하는 선관위 구성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권역별 비대위원장이 비대위 회의에서 내부 문제에 대해 언질을 했다”며 “경선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해당 행위에 대해 엄격하고 가혹하게 처리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통합된 마음으로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당원과 의원들의 하나 된 마음이 필요하다”며 “말로 분열되는 것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행위에 대한 경고는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탄핵 찬반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지도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앞서 전날 열린 의원총회와 의원 온라인 대회방에서는 ‘탄핵 찬성파’인 조경태·김상욱 의원에게 탈당을 요구하는 친윤(친윤석열)계 강경파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러한 탄핵 책임론이 과열될 경우 경선 과정에서 내홍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력 대선 주자들이 탄핵소추 찬성과 반대로 입장이 갈렸던 만큼 탄핵 책임을 두고 후보 간 세력 대결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평소보다 짧은 선거 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본선 승리의 열쇠를쥔 중도층 포섭도 경선 기간 국민의힘이 동시에 신경 써야 할 주요 과제다.

후보 선출 이후 외연 확장 행보를 보여줄 시간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당이 경선 기간 선제적으로 정책·민생 행보를 통한 중도층 공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 비대위 회의도 대선 공약과 연계될 수 있는 비전 논의가 진행됐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한국경제 리부팅’을 주제로 발표했고 지도부 토론이 이어졌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내 주류 목소리는 탄핵 찬성파에 대한 비판이 아닌 통합과 중도 확장으로 향해있다”면서 “반(反)이재명 전 선구축을 위해 중도와 웅진 수 있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경선도 중도층을 고려해 ‘컨센서스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치열한 후보 경쟁으로 ‘이재명 대표 대세론’이 형성된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성을 부각하며 국민적 관심을 끌어오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10여명의 잠재적 후보가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후보 압축을 위한 ‘컷오프’ 방식도 주목받는다.

당 관계자는 “후보 개인으로 이기기 어려운 선거이기 때문에 컷오프도 혁신적으로 해야 한다”며 “경제와 민생에 강점이 보이는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될 수 있는 경선을 보여줘야 한다. 국민 오디션 등의 아이디어도 거론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 56.9% “야권으로 정권 교체”

리얼미터…76.9% “현재 선고 수용”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전후로 정권 교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의 정권연장을 원하는 여론과 야권의 정권 교체를 원하는 여론의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대해 76.9%가 수용의 뜻을 밝혔고 17.4%가 수용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매주 조사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일 발표된 4월 1주 차 조사(2~4일)에서 조기 대선에서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 응답이 56.9%로 집계됐다.

반면,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응답은 37%에 그치면서 19.9%p의 격차를 보였다.

일주일 전 3월 4주차 조사에서는 야권의 정권 교체 응답이 57.1%로, 여당의 정권 연장 응답(37.8%)과 19.3%p의 차이에서 더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12월 4주차부터 매주 진행된 조사에서 가장 큰 격차를 보인 것이다.

정권 교체 여론은 권역별로 대전·세종·충청(54.7%, 4.7%p↑), 대구·경북(50.3%, 3.4%p↑)

↑)에서 높았고, 광주·전라(65.1%, 9.4%p↑), 부산·울산·경남(50.8%, 3.2%p↑), 서울(57.2%, 1.0%p↑)에서 낮아졌다. 제주가 88.5%로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이 가장 높았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90.9%가 정권 연장을 원했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5.5%가 정권 교체를 희망했다. 무당층에서는 정권 교체 여론이 47.5%, 정권 연장 여론이 21.2%로 정권 교체 여론이 우세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92.5%가 정권 교체를, 보수층의 74.6%가 정권 연장을 기대했다. 중도층에서는 정권 교체가 65.7%, 정권 연장이 29.6%의 응답이 나왔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4.8%, 국민의힘 35.7%로 조사돼 지난주 격차(11.2%p)에서 다소 줄었다. ㅠ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후 가장 필요한 정치적 안정 조치로는 사회갈등해소·국민통합 노력이 25.8%로 가장 응답자가 많았고 대통령 대변 등 정치제도 개혁(24.6%), 여야간 협치·국정운영 정상화(22%), 윤 전 대통령·이재명 대표의 공식 사과(17.6%), 기타·잘 모름(10%) 순이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대선에 4949억 소요…국힘, 이 선거 원인 제공자”

민주 최고위 박찬대 원내대표…한 대행에 낙하산 인사 중단 촉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7일 “이번 대통령 보궐선거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있다”며 “선거 원인을 제공한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힘은 1호 당원인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파면에 이르기까지 내내 윤석열 출당 등 징계조차 하지 않으며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했다”며 “누가 봐도 명백한 내란 동조 정당으로,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재·보궐 선거 원인 제공에 대한 책임 및 제재 강화에 관한 법안’ 8건이 발의됐는데 그중 7건이 국민의힘에서

낸 것”이라며 “자기 정당 1호 당원의 잘못으로 치러지는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2025년 대통령 보궐선거 비용을 주제해달라’는 자신의 요청에 국회 예산정책처가 4949억 4200만원이 발생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국민의힘이 염치가 있다면 이번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금액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들어간 비용(약 40억원)의 약 125배에 이르는 역대 최대 보궐선거 비용”이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때는 그해 12월 대선이 이미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박 원

내대표는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의 선거법 위반 사건도 수사하고 고소해야 한다”며 “김건희가 구악성경을 모두 외운다고 했던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야당과 같은 잣대로 기소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당선무효성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대선 기간 지원받은 보조금도 토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서는 “고위공직자 및 공공기관과 준정부 기관, 기타 공공기관 인사도 새 정부 출범 때까지 전면 동결해야 한다”며 특히 윤석열 정부 인사에 대한 알박기, 낙하산 인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대선 출마 선언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7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출마 선언문에서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며 “스스로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국민 헌법 형태로 개헌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헌에 올인하기 위해 출마한다”며 “정치 현장에서 체득한 경험, 경륜을 바탕으로 개헌 어젠다를 꼭 성사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025년 대변화는 국그릇을 통째

로 가는 것”이라며 “육사와 서울법대, 주사파 세력 중 육사 세력은 퇴장했으나 나머지 세력은 구질구질하게 자리를 배던터치 해가면서 국가 발전에 해를 끼치고 있다.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좌파 신념과 철학의 실패, 대통령 탄핵들이 그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도와 사람을 동시에 바꿔 유통기한이 지난, 국해(國害)한 걸림돌을 치우겠다”며 “건더기가 상했을 때는 30~40% 물갈이로는 안 된다. 국민과 함께 보수당 국그릇을 통째로

갈아엎겠다”고 다짐했다.

인사와 관련해선 “전문가들로부터 9명을 추천을 받고 다시 3명으로 압축해 최종 3명을 선정하는 9-3-1 식 국민인사를 시행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내가 최초의 보수당 호남 출신으로 선출된 당 대표였듯 이번에 호남 출신 대통령이 되면 대변화”라며 “이번 대선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든 호남을 국가 성장의 파트너로 삼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끊아먹는
기상 중이
되지마세요!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조작 군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군 브로커